

공기관 지방 이전 약발 끝?...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

통계청,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동과 향후 인구전망 발표 수도권, 2017년 이후 순유입 전환...지난해 8.3만명 규모 커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행정수도 및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차 이전 사업의 종료로 2017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다시 늘면서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인동은 2011년 최초로 '순유출'을 기록한 이후 2017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유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5만명에 이르던 수도권 순유입은 2011년 8만명 순유출로 전환된 이후 2017년 1만6000명으로 반등했다. 이후 2018년 6만명, 지난해 8만3000명 규모로 유입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동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 및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서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3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기간동안의 수도권 인구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일단락 되면서 다시 수도권

정수도 세종 이전 및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서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3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기간동안의 수도권 인구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일단락 되면서 다시 수도권

정수도 세종 이전 및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서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3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기간동안의 수도권 인구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일단락 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20대의 수도권 '순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30대는 2008년부터 순유출에서 2018년 순유입으로 전환, 4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순유출을 나타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수요가 많은 20대 이상 인구에서 '직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직업을 갖고 있는 비중이 높은 40대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수도권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7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전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순유입 규모 자체가 증가하기 보

다는 정부의 1차 이전 사업 종료에 따른 순유출 규모가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47만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이 늘어났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2018년 41만명에서 지난해 39만3000명으로 1만7000명이 줄면서 '순유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 유입 규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큰 폭의 변화가 없었지만 정부의 기관 이전 사업 종료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인구 수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유입 인구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통계플러스 여름호,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후 인구이동·개인소비 변화'

女·70세이상, 이동·소비 가장 크게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동이 가장 위축된 집단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주간지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 이동과 개인 소비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개인 휴대폰에 담긴 이동, 결제 정보를 이용해 코로나 전후 이동·소비 패턴 변화를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인구이동량 감소는 남성보다 여성 인구에서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4주차(2월24일~3월1일) 인구이동량을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한 결과 남성은 -26.8% 감소한 데 비해 여성은 -37.9% 감소해 더 큰 폭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미만이 -57.2%, 70

세 이상이 -29.2% 감소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활동이 적고 돌봄이 필요한 집단은 집안에 머무는 경향이 더 커진 셈이다. 반면 사회활동이 활발한 30~50대 인구는 이동량이 가장 적게 줄었다.

이같은 성별·연령별 경향은 소비 추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3월달 1인당 국내 카드 사용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6.1%, 여성은 -8.6% 역시 여성의 소비가 더 많이 위축됐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9.5%, 20대가 -8.9%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거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50대는 -4.2% 감소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덜 위축됐다.

인구 이동과 카드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주요 서비스업 경기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3월 서비스업 지수를 전년 동월과 비교

해보면 상업지역 숙박·음식점업 지수는 -32.5%, 관광지와 관련된 여행사·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지수는 -80.2%, 대형 아울렛과 관련된 전문소매점 지수는 -25.9%, 레저스포츠시설과 관련된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지수는 -53.9% 떨어졌다. 각종 서비스업종이 인구 이동·소비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인구 이동은 2월24일~3월1일 사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로는 꾸준히 회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경엔 주말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2.4%나 이동량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5월 초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인구이동량이 주중은 -13.2%, 주말은 -8.5% 줄어든 모습을 보여 원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나 기자

유통업계 '코로나19 영향' 계속 온라인 매출 늘고 오프라인 줄고

온라인 13.5% 증가·오프라인 6.1% 감소...전체 2.0%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통업에 미치는 여파가 5월에도 계속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유통의 매출이 4달 연속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부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5%가 증가했고, 오프라인은 6.1% 감소했다. 온·오프라인을 합친 유통업계 전체로 살펴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 증가한 11조 6300억원이었다.

3월 3.3% 감소의 '충격' 이후 지난달(+3.9%)에 이어 두 달 연속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매출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자제 등으로 인해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업체별로 보면 준대규모점포(SSM·-12.4%)이 가장 감소 폭이 컸고, 대형마트

(-9.4%), 백화점(-7.4%) 등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위생용품 소비 증가에 따른 생활용품 판매 증가와 함께 담배 판매 등이 늘면서 0.8%의 매출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온라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선호로 반사이익을 누렸다. 코로나19가 본격화 된 2월 이후 4개월 연속 매출 증가세(2월 +34.3%, 3월 16.9%, 4월 16.9%)다.

상품군 별 매출을 살펴보면 패션/잡화(-11.8%), 서비스/기타(-6.1%) 등 외부활동 관련 상품 매출은 감소하고, 가전/문화(+16.0%), 생활/가정(+12.7%) 등 가정생활 중심의 소비재 품목 매출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됐다.

온·오프라인 업체를 모두 합친 업체별 매출 구성비율에서도 온라인의 상승세가 계속됐다. 온라인의 매출 비중은 45.9%로 정확히 절반을 차지했던 전년 동월(41.2%)과 비교해 비중이 높아졌다.

김민정 기자

인터넷-TV 결합상품 회사이동 간편해진다

가입회사 변경시 기존 서비스 자동해지...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입회사를 바꾸면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2021년부터 가입회사를 바꾸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율하반기부터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자동 해지가 되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다.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A 통신사에 가입했다가 B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A통신사 고객센터에 일부러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으로 '해지신청'을 넣어 A 이동사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알리지 않는다. B이동사의 휴대폰으로 개통하는 순간 A

이동사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A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다가 B사로 이동하면 A사 가입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내용이다.

해지가 된 사업자는 소위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다.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해지방어와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통신사는 해지를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무려 70번이나 전화를 걸기도 하고, 해지를 누락시켜 이용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물도록 하는 피해사태도 나왔다.

최이슬 기자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수준 부가세 감면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부가세 경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유형장소 경영사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부가세 경감은 올해 12월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올 3월23일 확정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정부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올해 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면제 기준금액 상향은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 3월23일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재외국민의 부동산 성실신고를 위해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제가 시행된다.

7월1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의 등기이전 신청이 가능하게 돼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다.

NH-오일 광주전남 주유소장協 "면세유 적정 마진 유지"

NH-오일 광주전남 주유소장협의회가 면세유 판매가격 적정 마진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29일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는 "현재 면세유 판매에서 일반 주유소는 리터당 15% 마진을 보고 있는 반면 농협주유소는 7%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마진율을 유지하자"고 결의했다.

98개 회원 농협 가운데 55개 주유소장이 참여한 총회에서는 또 정품?정량 판매를 통해 농협주유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재나 안전사고 등 주유소 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